



### 사랑의 온도 올려 주세요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에서 어린 이들이 풍선을 들고 온정의 손길이 이어질지 기원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행복 온도탑은 2천50만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간다. /내영주기자 mjna@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들이 말하는 국정현안

## “균형발전 뒤집는 세종시 수정 철회를”

광주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터넷 패널 대부분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분류 뿐 아니라, 오염원이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관리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4대강 살리기 국민 우려 해소후 추진”

### “경제·인사 등 차별 영호남 갈등 키워”

◇윤봉래(광주 YMCA 광산지회 총괄간사)=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정부의 긍정적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균형 발전, 세종시 현안을 충분한 국민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뒤집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당초 오는 2012년 개통을 약속했던 호남고속철 완공시기를 늦춘 데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광주, 전남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강물을 살려야 하는 필요성은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수질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는 지역의 여론이 반영돼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미란 (전남대 교수·소설가)=국토 균형발전은 당위론에 가깝다. 특히 현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기존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종시 건설 원안과 취지를 살리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애초 세종시 건설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홍보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행정부처를 옮길 경우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를 오가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국익을 위한 사업을 수정하는 논리로서는 공색하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은 유지되고 계승 발전돼야

한다. 오묘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산강 분류와 함께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관리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염원이 되고 있는 지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영산강 살리기는 실패할 것이다.

◇문용주(의사)=현 정부가 영·호남 화합과 지역발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않고 인사, 경제 등 정책에서 오히려 차별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이미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니 만큼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입장에서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각종 여론에 대한 검증, 국민 설득을 통해 국책사업을 수정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보여줬으면 한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민의 여망인 강물을 살리는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현안이다. 그러나 문화건설에 대한 의욕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부족 때문이고 신뢰를 상실한 데 있다. 낙동강에 비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비가 적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병식(여수상공회의소 조사부장)=수도권은 이미 경쟁력을 갖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선 벨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민자 및 재정 투자를 통해서 남해안을 수도권 경쟁력에 버금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대 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욕과 우려를 해소한 뒤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한 뒤 결정해야 한다.

◇이극래 (무안 임성제일교회 목사)=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이 살아야만 가능하다.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지방엔 기업들도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다. 전남 지역만 봐도 그렇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충청도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공약을 내걸어 찍어준 것일 텐데 백지화하고 수정하려는 모습에 누가 찬성하겠는가? 또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움직임이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는 전남 도민들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자꾸 정책을 바꾸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윤영기·최권일·김필성기자 penfoot@

## 남해안 선벨트 후속조치 박차

### 팽목 마린시티·신안 송공항 개발사업 등 전남도 신성장 선도사업 지정 우선 추진

정부의 남해안 선 벨트 사업 구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남·경남·부산 등 3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선 벨트 구축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이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을 반기면서 지역발전 계획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는 특히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총 5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71개 사업 중 ▲팽목 마린시티 조성 사업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풍력발전 부품 생산단지 및 연구센터 설립 등 전남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팽목 마린시티 조성사업은 전남도의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된다. 팽목 마린시티 조성 사업은 이미 지난달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며, 연안항 건설공사 착수 및 어업피해보상도 끝마쳤다.

이 사업은 1조5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팽목항 일대 158만4천500㎡에 마린아항과 수산물 가공 특화단지, 냉동 및 선별장, 항만 배후 마을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신안군 압해면 송공항 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10월 전

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송공 연안항을 섬 지역 물류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11년 착공, 2015년 준공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안군 압해면 풍력에너지 연구센터 건립과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다. 국내 풍력산업을 녹색 성장 주력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소재 산업군의 집적화로 녹색성장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풍력에너지 연구센터는 풍력발전 부품 생산단지와 정부의 '글로벌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유망분야 육성 전략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소재 산업은 순천·보성(마그네슘), 목포(세라믹), 고흥(고분자), 광양만권(희유금속) 등으로 지역별·소재별 특화해 집중 육성된다. 이미 보성에는 마그네슘 생산공장이 건립중이고, 순천에 마그네슘 생산 동을 비롯한 자전지 산업 기반 구축이 진행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71개 사업이 모두 중요한 만큼 정부가 최대한 반영해 주도적으로 지역과 협력해 추진해 갈 것"이라며 "특히 이중 전남도가 역점·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전남, 외국인 소유 토지 가장 많다

도내 면적 0.3% 37.7km<sup>2</sup>...광주는 3.3km<sup>2</sup>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외국이 소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총 215.5km<sup>2</sup>로 서울시 면적(605km<sup>2</sup>)의 35.7%에 달한다.

전국 시·도 중 외국인 소유한 토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남(37.7km<sup>2</sup>)이며, ▲경기 37.6km<sup>2</sup> ▲경북 29.0km<sup>2</sup> ▲강원 19.9km<sup>2</sup> ▲충남 19.2km<sup>2</sup> 등의 순이다. 광주의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3.3km<sup>2</sup>이다. 전남지역 외국인 소유토지 37.7km<sup>2</sup>는 도내 전체 면적 12.212km<sup>2</sup>의 0.3% 수준이다.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07년 32.2km<sup>2</sup>에서 2008년 35.9km<sup>2</sup>로 확대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국적은 미국

이 32.1km<sup>2</sup>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합작법인이 21.9km<sup>2</sup>, 미국 교포가 8.1km<sup>2</sup>를 소유하고 있다.

전남 도내에서는 광양에 외국인 소유토지가 가장 많은 18.1km<sup>2</sup>로 절반에 달하고 있으며, 여수 6.1km<sup>2</sup>, 순천 0.9km<sup>2</sup> 등이다.

광양지역에 외국인 소유토지가 많은 것은 이곳에 외국계 회사가 몰려 있어 법인 자본이 50%가 넘는 회사의 토지를 외국인 소유토지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지역에 외국계 회사가 몰려 있어 외국인 소유토지로 분류되는 부동산이 많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전남지역의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싼 점도 외국인 토지 소유면적이 큰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암 매력한우  
맛있는 직판장

광주광역시 서구 차령동 1256-권이바들갈자당 뒤, 조선의 땅-영 Tel. 062) 373-9339

국립영암농업기술센터 4월 5일 11시